

원주국토관리청 6대 과제 추진 도로·하천사업 1조907억 투입

살기 좋은 강원권 국토 조성에 올해 1조907억원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전만경)은 도로, 하천 SOC사업과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6대 주요 과제를 선정,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원주청은 경기 광주~원주 민자고속도로와 국도공사 5건, 하천 사업 2건 등 대규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 간선국도 확충, 하천환경 개선 등에 박차를 가한다. 도로 분야는 민간자본 3,551억원, 건설보조 104억원을 포함해 모두 7,543억원이 투입돼 29건의 공사를 벌인다. 원주=유학렬기자

도내 건설 관련 단체 5곳 '실무이사협의회' 구성

도내 건설 관련 단체들의 권익을 도모하는 실무이사모임이 만들어진다.

4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도래미콘공업협동조합 도아스콘공업협동조합 도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과 대한건설협회 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 등의 실무자가 참석하는 실무이사협의회(가칭)를 구성,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실무이사협의회는 도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의하거나 지역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도회 등 관련 분야의 다양한 단체들의 추가 참여도 논의 중이다. 김보경기자

공공기관 발주 공사비용 산정방식 정상화

기초금액 기준으로 바꿔 건설사 적정공사비 지급 나서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산정방식이 정상화되며 건설사들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어 최근 한국도로공사도 예정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해 적정공사비 지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그동안 설계금액 대비 94~100% 범위에서 복수 예정가격 15개를 선정했

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기초금액 대비 98~102% 범위에서 선정 중이다. 이에 따라 공사비가 다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철도시설공단도 설계금액 대비 95~100% 범위에서 올해부터 기초금액 대비 97.5~102.5% 범위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달 입찰공고분부터 설계금액의 97~103% 범위 내에서 복수 예정가격 15개를 산정기로 했다.

이처럼 건설 관련 공사를 많이 발주하는 공기업들이 건설사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예정가격 산정방식을 정상화하고 있어 다른 공공기관 및 공기업들의 공사비 정상화 개선 방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부 공기업이 적정 공사비 확보에 나서면서 향후 건설사들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면서 "건설사의 수익성이 개선되면 부실공사도 줄어들고 견실시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원주~횡성~홍천~춘천 내륙종단선

국가철도망 '추가검토' 포함 관심

홍천군민 철도 건설 지역숙원사업 해결 기대

속보=원주~횡성~홍천~춘천을 잇는 내륙종단선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포함(본지 2월4일자 2면)되자 홍천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황영철(홍천·횡성) 국회의원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KOTI)이 수립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년)에 내륙종단선(원주~횡성

~홍천~춘천)이 추가검토사업으로 포함됐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공청회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 후 빠르면 5월말 최종 확정된다.

용문~홍천~춘천선의 경우 수서~용문 복선전철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사업성 확보가 안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

됐다.

원주~횡성~홍천~춘천을 잇는 내륙종단선의 거리는 51.4km로 899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천읍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우선 홍천을 경유하는 철도노선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기는 것이 중요한 만큼 최종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내륙종단선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

획에 반영시켜 홍천 철도라는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사업기간 내에 내륙종단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용문~홍천~춘천 노선이 경제성 부족으로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내륙종단선이 실현되면 용문~홍천~춘천선도 장기적으로 추진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천/유주현 joohyun@kado.net

박한 공사비에... 최대 실적에도 건설사들은 생존 걱정

적정공사비 확보 통한 원가율 회복 우선돼야

지난해 건설수주가 사상 처음으로 133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건설수주는 선행지표인 만큼 수주물량이 하나 돌출될 공사가 들어가고 공정률이 본격적으로 오르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 게 일반적으로 예상가능한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지금의 건설시장은 구조조정과 해고 칼바람에 휩싸여 있다. 건설사들은 이른바 '잡비기업', '한계기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구조조정 대상으로 떠올랐고 건설사 임직원들은 정부의 저성장 저임금과 저지급 여과 등으로 인해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여 있다.

박에서 보면 사상 최대 수주에 한바탕 잔치라도 벌여야 할 판이지만 시장 분위기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안감이 팽배하다.

역대 최대 실적에도 건설사와 임직원들이 생존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수주=이익'이라는 공식이 깨진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를 볼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공사비가 워낙 박한 데다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건설사의 토목공사 원가율을 보면 공사비가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작년 9월 말 기준 H사의 토목부문 매출액은 2845억원, 매출원가는 2863억원으로 토목부문의 원가율이 100.6%를 기록했다.

1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행했다면 6000만원의 영업손실을 봤다는 얘기다.

D사도 토목현장 곳곳의 원가율이 100%를 크게 웃돌았고 심지어 K사는 일부 토목공사의 원가율이 1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다른 건설사들의 토목현장 원가율도 100%를 훌쩍 넘는 곳이 허다하고 건축현장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시장에선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원가율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상 최대 수주가 사상 최악의 위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박경남기자 knp@



민간투자사업 대상이 확대되고,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민간제안이 이뤄짐에 따라 침체된 민자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전망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경찰서, 헌법기관, 교정시설 등이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아쉬움을 남겼다.

BTL '민간제안' 열렸다

4월 민간업계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2013년 8월 개정안을 처음 제안한 뒤 2년반 만에 이뤄진 것으로, SOC(사회기반시설)범위가 기존 49개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와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시 공영차고지 등이 추가돼 53개로 늘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고시사업이었던 BTL도 민간이 참여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었다.

이로 인해 일각 부속에서 시달린 민간업계는 이번엔 추가된 4개 시설은 물론 기존 BTL도 사업 발굴을 통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게 됐다.

'민투법' 2년반만에 통과 기존 고시사업서 개방

화장시설 등 사업대상 추가 지자체 청사·경찰서는 제외

민자업계 관계자는 "2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잠자던 법안이 통과해 민자시장과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엔 추가된 시설은 중소형 일괄이라 해당 분야에 특화된 중소기업에게 민자시장에 자리매김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도선 내 유망지가 많아 자유롭게 제안이 가능하지만 사업 발굴과 타당성 조사 등에 상당 시간이 걸려 당장 가시화되기 어려울 보인다"며 "또 제안해도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사업화 하는데 힘들어 주무관청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민자업계는 이처럼 법 개정을 일제히 반기면서도 지자체 청사와 경찰서, 헌법기관, 교정시설 등이 야망의 반대에 부딪혀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 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찰서 등이 대상에서 빠진 점이 가장 아쉽다"며 "특히 전국의 지자체 청사는 노후하고 재정도 부족한 데다 복합화 가능성이 많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적절한데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강원지역 철도시설 확충 탄력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강원지역 6개 노선이 포함됨에 따라 강원 도내에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3일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담긴 총 81개 사업 가운데 강원지역 노선은 총 6개로 동해선 강릉~제진(104.6km), 2호선 3490억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94km, 2조2158억원), 동해선 포항~동해(178.7km, 2410억원), 동해선형선 동해~동해항(3.6km, 578억원) 등이다. 이미 시행 중인 여주~원주(20.0km, 5001억원), 경원선 백마고지~월정리(11.7km, 1508억원) 등도 포함됐다.

특히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강릉~제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사업이 반영된 점이 고무적이다. 강릉~제진 노선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강릉~제진 등 6개 노선 반영 '최종 확정되도록 총력'

은 한반도중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노선으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가 선언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실현하는 핵심사업이다.

제진에서 북한 감호를 연결하는 구간에는 이미 철로가 만들어져 지난 2007년 5월 시험운행이 이뤄졌다. 그러나 남쪽의 제진~강릉 간에는 철로가 부설되지 않아 단절 구간으로 남아 있었다. 강릉~제진 철도가 개통될 경우 부산을 시작으로 동해선을 따라 북한을 거쳐 러시아·유럽 대륙까지 이어지게 된다.

2차 계획에도 반영됐던 춘천~속초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다. 윤영희수

동행요금 등 경제성 분석을 놓고 중앙정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도는 조만간 사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개통되면 동해와 서해상을 잇는 H형 철도망이 완성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원주~홍천~춘천선과 연천~월정리 경원선, 포항~강릉 북선전철 등 3개 사업은 추가 검토사업으로 포함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날 대전 철도타워에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상반기 중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강원도에서 요청했던 핵심도사업이 대부분 계획안에 담긴 만큼 최종 계획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희훈기자 hoony@

도, 올해 도로 확충 사업 5213억 투입

국도망 확충 3995억원 배정

올해 강원도내 도로 확충사업에 5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올해 강원도내 국도, 국지도, 지방도, 2018평창동계 올림픽 진입도로 등의 사업에 총 521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국도망 확충에 총 9개 노선, 3995억원이 들어간다. 강릉~횡성 간 국도 6호선의 강릉 두능~연곡(12.6km) 구간은 174억원을 투입해 올해 개통하고, 횡성 서원~공근은 150억원을 들여 내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한다. 국도 6호선 확충사업이 마무리되면 영동고속도로 통행량 포화로 인한 지정체가 해소돼 지역 관광산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도 5호선(원주~철원), 7호선(삼척~고성), 31호선(양구~봉화), 35호선(강릉~태백), 38호선(태백~삼척), 42호선(원주~동해), 46호선(춘천~고성), 59호선(태백~평창) 등도 사업이 추진된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시설 근접도로망 확충사업으로는 평창 봉평면 면온IC~보광(135억원), 평창 대관령면 월정삼거리~차항(214억원) 및 황계IC~진부(22억원) 등 총 371억원이 배정됐다.

도는 국가지원지방도 4곳(347억원) 및 지방도 15곳(500억원)의 확·포장사업도 실시해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준공된 춘천~속초고속도로(18.9km, 265억원)와 동해~삼척고속도로(18.5km, 183억원) 4차선 신설사업을 준공할 예정이다.

정희훈기자